

# 尹 설득 못하는 참모들, 면책되지 않는다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당 태종 때 직언하기로 유명한 위징(魏徵)이란 신하가 있었다. 황제에게 바른말을 300여 차례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루에 단번에 4번 했다가 격노를 사기도 했다. 당 태종이 '정관의 치'로 불리는 태평성대를 만든 건 위징의 공이 컸다. 위징이 죽자 태종은 '내 잘못을 보는 거울을 잃었다'고 애통해했다.

역사에서 묵숨 길고 직언하던 신하는 많았다. 그런데 위징이 유달리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간언보다 황제를 설득하는 능력 때문이다. 북쪽 돌궐이 세력을 키우자 태종은 18세 미만이던 건강하면 모두 징집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위징은 황제 명령인데도 따르지 않았다. 태종이 격노하자 '연못의 물을 빼면 당장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내년에는 물고기가 없어진다. 지금 18세 미만을 군대에 보내면 훗날 세금은 누가 내고 병역은 누가 맡느냐'고 했다. 위징은 쉬운 비유를 썼고 상식에 호소했다. 위징이 거칠게 '아니 되웁니다'만 외쳤다면 일찍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지난 총선 전후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주변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총선 직전에 굳이 출국시킨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다. 의료 파행이 악화하는데 대통령이 생장송 51분의 상당 부분을 의사 비판에 할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집권 초부터 연금 개혁을 누누이 강조해 놓고 핵심인 '내는 돈'과 '받는 돈'에서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는데 차기 국회로 미룬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국정을 이끄는 여당이 어떻게 고준

당 태종에게 직언한 '위징' 쉬운 비유로 오판 막아 태종 "역린 건드려 달라" '정관정요' 일독 권한다

위 방식성 폐기를 특별법이나 반도체법처럼 한시가 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마지막 국회에서 몽글 수가 있다.

잘못된 정치·정책적 판단이 가져오는 후과는 대통령실과 당정의 고위 참모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런데 이들의 직언과 설득으로 옳거나 틀린 결정이 바로 잡혔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수사받는 전 장관의 출국도, 의대 증원 담화도, 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연기도 전부 비상식적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참모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의 불통만큼 정권 참모들의 설득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공무원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삼삼오오 모이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를 화제로 삼는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고위직들은 피할 데가 없다. 정권이 실패하면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 위징은 '양신(良臣)'과 '충신(忠臣)'을 구별했다. 양신은 군주 잘못을 설득해 자신과 나라를 같이 성공하게 하는 반면, 충신은 바른말만 하다가 군주와 같이 망하는 신하라고 했다. 이 정부에 양신이라고 할 만한 참모가 있다. '순장조'가 될 충신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권 성패는 대통령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경청 태도와 참모들의 설득 능력이 모두 중요하다. 당 태종과 신하들의 대화를 정리한 고전이 '정관정요(貞觀政要)'다. 여기엔 태종이 신하들에게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것을 피하지 말고 간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목이 있다. 태종은 묵숨처럼 아끼던 황후가 죽자 매일 누각에 올라 황후 묘를 쳐다보며 국정을 등한시했다. 누구도 '역린'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위징은 '아버지 묘를 보시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나라를 물려받아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다. 태종은 역린을 만들려 하지 않았고 위징은 요령 있게 역린을 건드렸다. 당이 패권국이 되는 초석을 깔았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3년 가까이 남았다. 지금이라도 '정관정요'를 일독하길 권한다.

김준의 맛과 섬 [192]

## 통영 간섬 돌미역 냉국



충무공은 갑오년 3월 신축 '난중일기' (1594년 3월 24일)에 '맑음. 몸이 조금 나은 것 같다. 방담침사, 흥양현감, 조방장이 보러왔다. 견내량 미역 53동을 캐었다. 발포만해도 와서 만났다'라고 적었다. 충무공은 많은 전투, 여수에서 한산도로 통제영을 옮긴 후 통제사 부임, 원군과 갈등, 아산 고향 피해 등으로 몸과 마음이 몹시 쇠잔했다. 이 무렵 장수들이 통제사를 찾아오면서 곧잘 견내량 미역을 뜯어 왔다. 견내량은 거제와 통영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다. 미역이 장군의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믿었다.

지난 5월 중순 연기마을에 다녀왔다. 연기마을은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어촌으로 통영에서는 간섬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다 건너 거제시 광이마을과 함께 5월이면 트릿대를 이용해 미

역을 채취한다. 두 마을이 이용하는 미역밭은 거제대교에서 연기마을 해안도에 이르는 바다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역을 실은 배들이 하나둘 포구로 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미역이 잘되어서 활기가 넘쳤다.

주민들은 "조류가 세면 미역을 뜯을 수 없어요. 조류가 약해지면 다시 나가려고요"라고 했다. 점심시간이라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조류가 거친 바다에서 좋은 미역이 자라지만 밤상에 올리려면 조류가 약해지는 시간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곧추선 미역을 뜯을 수 있다. 누운 미역은 트릿대로 감을 수 없다.

트릿대는 나무로 만든 트릿손, 긴 대나무를 이용해 트릿대, 미역을 감는 트릿통, 트릿살로 이루어져 있다. 트릿손, 트릿대, 트릿통을 차례로 이어서

묵으면 10여m에 이른다. 트릿통 끝에 트릿살 두 개를 끼워 수심 5~6m에서 자라는 미역을 감아서 뜬다. 낮으로 베는 미역과 달리 미역귀 뒷부분만 감아서 채취하기에 포자가 오듯이 보호되는 지속 가능한 어업이다.

간섬 미역(견내량 미역)은 끓여도 물러지지 않고, 돌미역이지만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톱살이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그래서 5월 햇미역이나 생미역을 구해 여름 미역냉국으로 즐겨 먹는다. 점심은 마을 안 카페에서 멍게밥 돌미역살러드로 해결했다. 통영산 멍게와 간섬 돌미역을 이용한 식당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 사기 특별법과 '셀프 투해' 논란의 민주화유공자법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불거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의혹이 남을 경우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갖은 역할을 부러 만든 수사기관인데 이조차 믿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단독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무리를 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공식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 재론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거부했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법과 다른 법안들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연금 등 다른 민생 법안들

은 별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었다. 특검법과 민생법이 무슨 상관이라고 한꺼번에 거부하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방패장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 보호 3법과 대항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여야 합의가 됐는데도 줄줄이 폐기됐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대통령 뜻이 더 중한가.

21대 국회는 29일 공식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30일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질질했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위로 날을 지새웠다.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 21대 국회에서 2만585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67건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낮다.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를 '완성'시켰다.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보다 나아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한번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연발하고 있다. 이 정치로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中 '64조 반도체 펀드' 조성, 韓 여당은 반도체 지원법 뒷전

미국의 반도체 장악에 맞서 중국이 64조원 규모 기금을 만들어 '반도체 굴기'에 나선다. 중국 정부와 6대 국유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중국은 이미 두 차례 61조원 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1차 펀드가 반도체 생산, 2차 펀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주력했다면 이번 3차 펀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집중한다. 세 번째 펀드까지 출범하면 중국이 10년간 투입하는 반도체 자금 규모는 130조원에 달하게 된다.

미국과 EU는 총 110조원을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지원하고 있다. 'TSMC 보유국' 대만은 직접 보조금 대신 한국처럼 세액 공제 방식으로 지원하지만 연구·개발 등 반도체 인프라 조성만큼은 대만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대만은 10년간 12조7000억원을 쏟아부어 반도체 설계와 AI(인공지능) 분야 해외 스타트업에 대만으로 유치하고 글로벌 반도체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지난 3월 시작했다. 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모두 반도체 전문가다.

미국과 일본, 대만, 중국 등이 국가 미래가 달린 반도체 산업

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펴는 이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최소한의 반도체 지원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된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 세금을 돌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로 일몰을 맞게 된다. 이를 2030년까지로 연장해주는 법 개정안이 올 1월 발의됐는데 역시 폐기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혜택조차 올해를 넘기면 사라질 판이다. 이 법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른 정치 목적으로 처리를 거부한 때문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세계 최대로 조성한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수요량이 원전 14기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하다.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 갈등을 중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역시 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실손보험 연 2조원 적자, '사기' 수준 행태들 만연

질병·상해 치료 때 쓴 실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이 지난해 1조9738억원 적자를 냈다. 포화 상태에 달한 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과 큰 변화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액이 1조2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만들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의 최대 원인은 병원들이 수입을 올리려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건당 1000만원에 달하는 배내장 수술이나 수심 만원씩 드는 도수 치료, 갑상샘 결절 고주파 절제술, 비타민·영양주사 등을 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는 복지가 과잉 추종 줄기세포를 무를 관경장에 넣는 치료법을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른바 '무류주사'가 적자의 새로운 구멍으로 등장했다. 구멍만 생기면 병원과 의사가 돈을 챙기려 달려든다. 보험사들이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

는 경우가 잦아 보험 가입자들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이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도하게 진료받는 '의료 쇼핑'도 적자를 더욱 키우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2.2%(75만명)가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간 반면 63.5%는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소수의 과잉 진료가 전체 가입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수록 적자가 나니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자칫 공적(公的) 건강보험과 사적(私的) 실손보험의 두 축으로 이뤄진 의료보장 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 보험사 적자가 커지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입자에게도 손해다. 만성 적자 구조를 수술하는 방법은 병원과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대폭 손질하고 의사와 가입자·브로커 등이 짜고 하는 보험 사기 조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 국민의 나라? ... 헛소리 민중의 나라, 개딸의 나라 만들겠다는 것

# 이재명의 무시무시한 소리 ... 직접 민주주의 운운은 차베스처럼 하겠다는 것

차베스 수법으로 권력 잡겠다는 술책 [직접 민주주의 확대는 [홍위병 정치] 하겠다는 술수 주요 언론도 국민도, 그 위험성 몰라 ... 마비된 사회

이재명, 정체 속속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말하라. 당신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재명은 23일 봉하 마을로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 국회의장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원 2만 명이 탈당했다. ★ 당원 권한을 늘리는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하겠다. ★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돼야 한다. ★ [미래형 민주주의-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섰다.

[직접 민주제를 [미래형 민주주의]라고 부른 것을 보면, 그는 [간접 민주주의]를 [도태될 구제]로 보는 듯하다.

이게 뭔 소리인가? 무시무시한 소리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주요 언론들조차 이 말뜻을 제대로 짚고 놀라는 기색이 없다. 그만큼 이 사회는 마비되었다.



▲ 체스처와 표정도 비슷하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이나 풀모델인 듯. 이재명은 강성 개털을 홍위병 상아 민중민주주의 독재 통치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뉴데일리

### [중우정치] 선배 차베스 따라하기

이재명의 그 말은 한국 좌파의 [민중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권의 궤적(軌跡)을 연상시킨다. 당을 강성 지지층의 좀비로 만들고, 체제를 전체주의적 민중주의로 변혁한 그들.

- 차베스는,
- ① 사법부부터 장악했다.
  - ② 재헌의회를 소집해 입법부를 장악했다.
  - ③ 차베스 장기 집권으로 개헌했다.
  - ④ 전국에 <주민 평의회>란 직접 민주제 조직을 깔았다.

한국 운동권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란 직접 민주제도 정식 법 아닌 시행령으로 운영한다.

### 광장 정치, 홍위병 정치, 개딸 정치

[간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덜 한 것이었나?

그렇지 않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이 모두 [간접 민주주의]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래야, ★ 3권을 분산할 수 있고 ★ 권력의 자의성을 제한할 수 있고 ★ [독재자의 등장도] [개딸 민주주의]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과 여론의 참여 폭을 넓혀 가야한

다. 그러나 [참여 확대]를 빙자한 [독재자 + 홍위병] 등장만은 엄격히 경계해야 한다.

### 미친 중우가 미친 독재자 만든다

★ 히틀러의 유대인 600만 학살 ★ 스탈린의 피의 숙청 ★ 마오쩌둥의 인민공사와 홍위병 정치 ★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모두 그런 타락한 [직접 민주주의]였다. [미친 독재자 + 미친 중우(衆愚)]가 합작해 만든 ★ 1984 ★ 동물농장 ★ 아우슈비츠였다.

[이재명 + 광명도] 마침내 [직접 민주제]를 선언했다. ★ 탄핵 쿠데타다. ★ 혁명이다. ★ 내전이다.

응답하라, 한국인들. 중대범죄 피고인들의 도둑 배 정치 (kleptocracy)를 방관할 작정인가?

1류근 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5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